

열린마당에서의 생명평화발언(한국)

박영숙 여성환경연대 으뜸지기

생명과 평화에 대한 한국의 시각은 우리나라 석학들에 의해 2003년도부터 해마다 개최된 세 번의 포럼에서 이미 표명되었다고 전제하고 저의 오늘의 짧은 발언은 '92 유엔환경과발전회의(UNCED)와 '02 요하네스버그에서의 세계지속가능발전정상회의(WSSD) 등의 국제회의에서 발로된 문제들을 짚어보면서 전 지구적인 실천운동을 염두에 두고 동아시아·태평양 신문명의 구체적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려고 합니다.

'72 스톡홀름에서의 인간과환경회의를 필두로 1992년도와 2002년도에 개최된 지구정상회의를 비롯한 크고 작은 국제회의들이 빈번하게 열리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한 협약이나 행동강령들이 양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서 기조강연을 하여주신 에르빈 라즐로 교수도 지적했지만 2005년도에 출판된 <성장의 한계 그 후 30년간>이란 보고서에 의하면 지구환경의 지표는 날로 악화일로에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의 지구환경이 더 이상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인식은 누구나가 분명히 하고 있으면서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에 있어서는 빈부격차로 인한 남북간의, 그리고 국가간의 이해대립으로 회의장은 외교의 각축장을 방불케 하고 있는데서 그 근본원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결과 합의된 행동강령이나 체결된 협약들이 주요의제는 배제된 채 또는 구속력과 필요재정충당방안이 미비된 채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브룬트란

트보고서는 ‘지구는 하나인데 세계는 하나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갈망하고 있는 생명과 평화의 지구사회 회복의 길은 험하고도 멀니다. 국가간의 그리고 남북간의 이해대립으로 교착상태에 빠져있는 국제회의나 정권유지를 위한 인기몰이를 할 수밖에 없는 국가정부들의 탁상공론의 말잔치에서 지구환경문제 해결의 전망은 찾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희망이 있다면 자기의 선 자리에서 환경친화적인 생활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시민사회의 풀뿌리조직체(NPO)들의 역할입니다. 지구환경문제가 아무리 거창하고 복잡하다고는 하나 문제해결의 실마리는 지구시민 개개인이 선택한 삶의 양식과 실천의지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구환경문제 해결은 국가정상들의 합의에 의해 성과를 볼 수 있는 군사문제와는 달리 지구사회의 개개인의 참여가 필수요건입니다. 시민사회단체는 실천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국가이익에 대한 집착에서 보다 자유로우며 국내외적 연대를 이루어낼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국제포럼은 NPO의 포럼입니다. 전 지구적인 살림운동을 전개하기 위해 삶의 양식에 있어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기 위한 신문명을 창출하는 것을 의도하고 있습니다.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국제사회가 가장 중시하고 있는 생활양식의 변화(생산양식의 변화)를 위한 신문명논의입니다.

지역적인 인간의 삶의 양식을 ‘문화’라고 하는데 대해 문명은 인간의 지구적인 생활양식을 말합니다. 인류는 지금 문명의 기로에

서있습니다. 인류가 어떠한 생산과 소비의 양식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류의 지속적인 생존 여부가 결정되게 되어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삶의 양식이 죽음으로의 줄달음이었다면 지금으로부터의 삶은 생명과 평화가 지배하는 새로운 삶의 패러다임을 향한 것이어야 합니다.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계기는 철저한 위기인식에서 창출된다고 합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위기에 처할 때마다 필요한 혁명을 일궈냈습니다. 농업혁명, 도시혁명, 과학혁명, 산업혁명 등이 이러한 예인데 이들은 어떤 의미의 기술혁명으로 극복할 수 있었던 변화인데 반해 우리가 지금 해내려고 하고 있는 ‘환경혁명’ 또는 ‘지속가능성혁명(생명과 평화)’은 기술혁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어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은 쉽게 말해서 지금까지 10개 먹던 빵을 5개로 만족할 수 있는 정신상태를 만들어내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욕망억제의 철학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이 포럼의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인간사회에서 욕망을 억제하는 기능은 종교나 문화 그리고 전설 등이 일정부분을 담당해오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혁명이 필요로 하는 ‘정신혁명’은 사회적인 대혼란 속에서 탄생한다고 합니다.

절박한 위기의식 또는 사회적 대혼란이 변혁의 계기가 된다는 것의 맥을 짚으면서 아시아에서의 신문명이 탄생할 가능성에 대한 예측은 여러 연구 조사에서 표명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이 대혼란의 요인을 배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한 예로 현재 거대

인구국가이면서 인구증가곡선이 계속 상승하고 있는 중국과 인도의 소비추세가 판도라의 상자가 열린 듯 걷잡을 수 없이 거세게 확산되고 있는데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대혼란의 조짐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세계의 자원다소비기득권층의 소비와 생산구조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 동안에 소비가 억제되었던 거대인구가 소비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데서 빚어지는 현상을 놓고 예측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 극동아시아의 여성환경인들의 모임에서 중국대표가 오늘의 중국의 소비추세가 지속되려면 몇 개의 지구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한 것에서 짐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인들이 인류의 미래를 구제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지고 있다고 기대를 걸었던 인도에서 최근의 꿈틀거리는 소비욕구가 예사롭지 않은 데서도 불안요인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나라의 상황은 세계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위기상황의 축소판인 듯합니다. 경제, 사회, 문화, 환경 등의 균등한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이란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총체적인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지구상의 유일한 분단국가로서 떠안고 있는 위협요인들, 세계화 추세에 의한 사회 각 부문의 양극화 현상에서 빚어지는 갈등들, 미국의 전략적 유연성에 의한 군사기지 확장에 따른 반평화요인들, 삼보일배 또는 120일간의 단식으로 항거해도 끄떡하지 않는 정부의 성장추구로 생태계가 파괴되고 있는 현실이 우리 사회의 변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이 성숙한 증거로는 시민사회가 여러 부문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위기극복의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새로운 패러다임 운동이 가동되었습니다. 산업사회에 있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일환으로서의 환경친화적 또는 가족친화적 경영의 시도, 일자리 나누기, 더불어 사는 사회, 나눔의 문화 확산 등의 사회양극화 해소노력 등의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문제를 지적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혁작업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정부에게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시민사회가 세상을 바꾸는 작업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는 것입니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에르빈 라즐로 교수도 동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알맞은 새로운 생명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구체적인 가능성은 생명문화에 대한 시민사회의 역할에 전적으로 달려있다고 했습니다. '92 리우회의에서 합의된 지구환경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인 '의제21'에서도 지속가능한 사회발전을 위해서는 사회구성원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방정부를 포함한 9개의 주요행위자(여성, 청소년, 선주민, NGO, 근로자와 노동조합, 기업, 과학기술자, 농민)들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행정의 형태가 통치(government)에서 협치(governance)로 전환된 계기가 된 것입니다. 협치란 정부, 기업 그리고 시민사회가 대등한 관계의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데서 가능합니다. 오랫동안 <관존민비> <남존여비> <국존지비>의 3비현상이 지배해온, 제대로 된 시민혁명과정을 거치지 않은 아시아권의 여러 나라들에서는 관과 민 간의, 여성과 남성 간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힘의 균형을 이루는 과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이 포럼은 2003년도의 '21세기 문명의 전환과 생명문화'에 이어 해마다 '한국의 생명담론과 실천운동' '동아시아의 문예부흥과 생명평화'라는 주제 하에 담론을 계속해오고 있으며 금년에는 '동아시아·태평양 신문명의 구체적인 가능성 모색'이라는 명제로 태평양지역까지 확대해서 생명사상, 생명문화, 생명정치, 생명경제를 논의하는 마당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명실 공히 전 세계적인 살림운동을 지향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적으로 이 국제포럼에 기대하고 제안하는 것은 지구상에는 반생태적인 요인을 걷어내기 위한 활동에 저항하는 막강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세력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우리는 구축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역동성 있는 실천운동이 필요로 하는 행동강령과 연대망 그리고 이행사항 점검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국제사회에는 생명과 평화(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대한 각 부문의 담론들이 산재해 있으며 다양한 이행방안들이 모색되어 있고 무수한 추진조직들이 각기 활동하고 있습니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이들을 엮어내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들이 엮어진다면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유엔이 지구보전을 위한 행동강령인 '의제21'을 제정한지도 20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지구환경이 개선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것은 실천이 따라주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담론이 담론으로 머물지 않기 위한 대책이 확실하게 이 포럼에서 마련되어야 합니다.

'성장의 한계'의 저자들이 '성장의 한계 그 후 30년간'을 펴내면서도 거듭 주장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구시민 모두가 국제사회의

일원임을 인식하고 돌봄의 정신, 현세대뿐만이 아니라 미래세대까지도 배려하는 인류애로 무장한 사람들의 유기적인 인간그물(network)의 구축이 중요합니다.

인류문명을 서양문명과 동양문명으로 이분하면서 전자는 자연대결형, 자연수탈형, 자연파괴형인 부성형 물질문명인데 대해 후자는 자연순응형, 자연순환형, 자연공생형인 모성형의 정신문명이라고 그의 저서 <문명론-문명홍망의 법칙>에서 주장하고 있는 일본의 기시네 다구로우 교수가 문명과 문명파(文明波)의 관계를 해수와 파도의 관계로 풀이하면서 이 둘은 성분을 같이하고 있으나 에너지의 집적 없이는 해수가 파도로 될 수 없는 것처럼 에너지를 집적시키지 못한 사회의 문명은 문명파를 일으킬 수 없다고 한 바와 같이 인류가 지구상에서 생존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결집된 힘으로 문명사적 변화를 일으켜야 합니다.

지구시민들이 발붙이고 있는 지역에서의 생명평화의 살림운동으로 형성된 문화의 바람이 전 세계에 미치면서 새로운 인류문명의 탄생으로 인간과 인간,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조화로운 삶의 터전이 마련되기를 기대합니다.